

#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27 |
|----------|------|

2025년 4월 30일  
운 영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. 02. 03. 김종길 의원 등 28명.

나. 회부일자 : 2025. 2. 6.

다. 상정일자 : 제330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

- 2025년 4월 3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오늘날 전 세계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,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.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정부와 기업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앞다투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.
- 미국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중에 법인세율을 최고 35%에서 21% 단일세율로 낮춘데 이어 두 번째 임기 중에 미국 내 사업장의 법인세율을 15%까지 낮출 것을 공언함.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효율을 이끌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“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”고 말하기도 하는 등 세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철폐에 골몰하고 있음.

- 우리 정부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8년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,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2021년 규제 챌린지를 통한 민간의 규제 개선 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임.
- 최근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, 2, 3, 4호의 규제철폐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음.
- 각종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와 불확실성을 극복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, 가장 사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조속한 규제철폐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임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간의 다양한 규제철폐 제안을 확인하고,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,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
-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기     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최현재)

###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

-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의 전반적인 규제철폐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) 차원에서 서울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철폐를 제안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.

###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

- 서울시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‘규제와의 전쟁’을 선언하며,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핵심과제 삼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<sup>1)</sup>.
  - 2025년 1월 14일, ‘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’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 100명을 초청하고, 일상 속 규제 및 업종별 규제, 서울시가 도입 또는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논의하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<sup>2)</sup>.
  - ‘100일 규제 집중신고제’를 운영하여,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신규 신고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중·장기 검토 및 불수용 과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함.
  -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지속 제기된 규제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전수조사하여, 관행적으로 유지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, 분야별, 기관별 규제 중 개선 필요성이 있는 안건을 제출하고, 사업 지연을 일으키는 내부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.

1)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, 규제 철폐 100일 실행계획, 2025.1

2) 서울특별시, 시민이 묻고 오 시장이 직접 답한 규제철폐 대토론회… 규제풀어 민생 살린다, 2025.1.14

- 시민과 공무원이 발굴·제안한 안건 일체를 서울연구원(규제개혁혁신연구단)이 행정적인 규제철폐 방안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담은 구체화된 안건으로 작성하도록 함.
- 구체화한 안건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‘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’를 통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하고, 필요성 및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규제철폐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함.
- 심의회 권고안은 ‘민·관 규제철폐 거버넌스 회의’를 통해 민·관이 공동으로 검토하며,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하여 합리적이고 실행력 있는 최종 의사결정을 도출함으로써 규제철폐 안건을 총괄 심의함.

#### <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 절차 >

| 단계 | 제 안                  | 분류·구체화                       | 권고안 마련                  | 최종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역할 | ①시민 의견수렴<br>②직원 창의제안 | ①규제와 단순민원 분류<br>②규제철폐 제안 구체화 | ①규제 심사<br>②규제철폐 권고      | 규제철폐 결정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체 | 시민·공무원<br>(市 기획조정실)  | 서울연구원<br>(규제혁신연구단)           | 민간전문가<br>(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) | 시장 및 민간전문가<br>(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) |
| 시기 | 수 시<br>(1-3월)        | 수 시<br>(1-3월)                | 주 1회<br>(1-3월)          | 총 3회<br>(2-3월)               |

자료: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, 규제 철폐 100일 실행계획, 2025.1

- 2025년 1월 6일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·2호 발표를 시작으로,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하여, 2월 17일 총 32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음<sup>3)</sup>.

#### < 서울시 규제철폐안 >

| 구분 | 규제철폐안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호 | 상업·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| 도시계획과   |
| 2호 | 환경영향평가 분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| 친환경건물과  |
| 3호 |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           | 주거정비과   |
| 4호 | 통합심의회 소방성능·재해분야 포함           | 주거정비과   |
| 5호 |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            | 정원도시정책과 |

3) 서울특별시, 서울시,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… 10건 추가발표·현재 총 32건, 2025.2.16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호  | 입체공원 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| 시설계획과                      |
| 7호  |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   | 일자리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|
| 8호  |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       | 돌봄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|
| 9호  |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                | 자치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|
| 10호 |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          | 재산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11호 |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             | 상권활성화과                     |
| 12호 |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             | 도시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13호 | 건설공사 50%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       | 건설혁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|
| 14호 |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         | 계약심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15호 |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       | 계약심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16호 |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              | 정보시스템과, 계약심사과              |
| 17호 | 공유재산 취득·처분·관리 기준 가격 상향      | 재산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18호 |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           | 계약심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19호 |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                 | 기후환경정책과                    |
| 20호 |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           | 아이돌봄담당관                    |
| 21호 |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          | 창업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|
| 22호 |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                | 어르신복지과, 다문화담당관             |
| 23호 |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             | 건축기획과                      |
| 24호 |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 | 급수설비과                      |
| 25호 |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       | 안전조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26호 |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           | 영유아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|
| 27호 |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신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 | 저출생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|
| 28호 | 차량진출입로(승차구매점 포함) 설치시설 요건 완화 | 보행환경개선과                    |
| 29호 | 수의 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대상 명확화     | 재산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|
| 30호 |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  | 디자인산업담당관<br>문화유산보존과, 산업입지과 |
| 31호 |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   | 서울디자인재단                    |
| 32호 |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    | 서울시복지재단                    |

○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서울시 규제철폐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, 서울시 규제철폐안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, 각 상임위원회의 현안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또한,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, 특별위원회 구성요건<sup>4)</sup>에도 부합함.

4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

○ 결의안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제2항<sup>5)</sup>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- 운영위원회가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동의하였으며,
-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부서 의견 없음.

담당 연락처

02-2180-7688

---

5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(특별위원회)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,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의원 13명, 출석위원 8명, 찬성 8명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(김종길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27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김종길, 강석주, 곽향기,  
김규남, 김영철, 김원태,  
김재진, 김태수, 김현기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도문열, 박영한, 서상열,  
서호연, 심미경, 유만희,  
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 
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  
최민규, 허 ·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8명)

## 1. 주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 규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설정과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‘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-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,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오늘날 전 세계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,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.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정부와 기업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앞다투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.

- 미국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중에 법인세율을 최고 35%에서 21% 단일세율로 낮춘데 이어 두 번째 임기중에 미국 내 사업장의 법인세율을 15%까지 낮출 것을 공언함.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효율을 이끌 일론 머스크는 지난 달 의회를 방문해 “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”고 말하기도 하는 등 세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골몰하고 있음.
- 우리 정부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8년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,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2021년 규제 챌린지를 통한 민간의 규제 개선 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임.
- 최근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,2,3,4호의 규제철폐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음.
- 각종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와 불확실성을 극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, 가장 사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조속한 규제철폐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임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간의 다양한 규제철폐 제안을 확인하고,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,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### 3. 이송처

- 서울특별시의회

##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오늘날 전 세계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,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.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정부와 기업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앞다투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.
- 미국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중에 법인세율을 최고 35%에서 21% 단일세율로 낮춘데 이어 두 번째 임기중에 미국 내 사업장의 법인세율을 15%까지 낮출 것을 공언했다.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효율을 이끌 일론 머스크는 지난 달 의회를 방문해 “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”고 말하기도 하는 등 세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골몰하고 있다.
- 우리 정부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8년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,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2021년 규제 챌린지를 통한 민간의 규제 개선 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.
- 최근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분야 규제

철폐안 1호(상업·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의 용도비율완화)를 포함해 2,3,4호의 규제철폐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등 규제철폐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나서고 있다.

- 각종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와 불확실성을 극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, 가장 사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조속한 규제철폐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간의 다양한 규제철폐 제안을 확인하고,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,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한다.

2025. 1. 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